

복지자금대여취급요강

제 정 : 1992. 7. 7
1차개정 : 1993. 4. 7
2차개정 : 1993. 7.23
3차개정 : 1995.12.30
4차개정 : 1996. 7.28
5차개정 : 1997.12.31
6차개정 : 1998. 2. 7
7차개정 : 1999. 7. 5
8차개정 : 1999. 9. 2
9차개정 : 1999.12.16
10차개정 : 2000. 9.30
11차개정 : 2001. 2.15
12차개정 : 2001. 4. 2
13차개정 : 2001. 6. 1
14차개정 : 2001. 8.18
15차개정 : 2002. 6. 3
16차개정 : 2002. 9.19
17차개정 : 2004. 1. 1
18차개정 : 2005. 9.20
19차개정 : 2011. 1. 1
[20차개정 : 2016.12.15](#)

제 1 조(목적) 이 요강은 복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 및 복지자금(이하 "복지자금"이라 한다) 대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요강에 의한 복지자금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에게만 대여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원
2.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

제 3 조(대여원칙) 복지자금의 대여는 직원의 생활안정등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 4 조(자금의 종류 및 한도) 복지자금의 종류 및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둘 이상의 자금을 동시에 대여받을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합계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2호 및 제3호의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여한도는 원리금상환액이 실제로 수령하는 월정급여의 50% 범위내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1. 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자금(이하 "주택자금"이라 한다) : 8천만원 이내

2. 주택임차금(전세금)지급을 위한 주택임차자금(이하 "주택임차자금"이라 한다) : 5천만원 이내

3. 대학생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 3천만원 이내

제 5 조(대여의 취급등) 대여의 승인 및 사후관리를 하는 자(이하 "대여승인권자"라 한다)는 본사 복지담당팀장으로 한다.

제 6 조(자금용도등) 대여금취급시에는 직원의 월정급여 및 직급 등에 비추어 자금의 용도와 차입 신청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여금액의 적정화를 기하여야 한다.

제 7 조(대여의 제한) ①주택자금대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급할 수 있다.

1. 자금용도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원이 부양가족과 동거하고 있거나, 30세 이상인 경우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직원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1주택을 소유한 채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고 최종잔금 지급일까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로 한 직원.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기로 한 직원.

3. 직원(임차주택을 대여받고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 또는 건설하는 경우

4. 주택임차자금대여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5. 대여취급일 이전에 주택자금대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②주택임차자금대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취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원이 부양가족과 동거하고 있거나 30세 이상인 경우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직원

나. 직원소유의 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되는 경우

2. 대상 임차주택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소유가 아닌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3. 공사로부터 주택대여 또는 주택자금대여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③학자금대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급 할 수 있다.

1. 직원의 자녀 또는 동생이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다만, 동생의 경우에는 직원이 장남 또는 장녀로서 부가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이고, 모가 사망하거나 만 50세 이상으로 부양능력이 없어 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직원이 부담하는 때에 한한다.

2. 중복수학이 아닌 경우

3.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이중지원 심사결과, 기 지원내역이 없는 경우

제 8 조(대여조건) ①주택자금대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금리 : 연 3.5%

2. 대여기간 : 20년(5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3. 상환방법 : 거치후 성과급 지급일에 균등분할 상환. 다만, 이자율을 달리하는 원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원금을 먼저 상환한다.

4. 이자징수방법 : 매월 급여지급일에 후취함

5. 대출형식 : 증서대출

6. 대여금액 : 다음 각목의 1의 금액 이내

가. 매입시 : 시가감정액의 100%와 매매가격의 50% 중 큰 금액

나. 건설시 : 소요자금의 80%

②주택임차자금대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금리 : 연 5%

2. 대여기간 : 주택임차 계약기간 이내로 하되, 최초 대여취급일로부터 합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대여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계약(2년한도)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4. 이자징수방법 : 매월 급여지급일에 후취함

5. 대출형식 : 증서대출

③학자금 대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금리 : 무이자

2. 대여기간 : 당해 학자금대여의 대상이 되는 자녀 또는 동생이 졸업 또는 중퇴한 후 3년 이내. 다만, 당해 학자금대여의 대상이 되는 자녀 또는 동생 각각에 대한 총대여기간은 최초대여취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상환방법 : 당해 학자금대여의 대상이 되는 자녀 또는 동생이 졸업 또는 중퇴한 후 급여지급일에 균등분할 상환

4. 대출형식 : 증서대출

5. 대여금액 : 등록금 전액. 다만, 책값, 국민저축 등 금전 또는 실물로 반대

급부를 받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 9 조(이자계산방법) ①복지자금의 이자는 원금에 연이율과 대여일수를 곱한 후 365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대여일수는 대여지급일로부터 처음 오는 급여지급일 전일까지의 날수로 하며 그 후에는 급여기준일로부터 그 다음 급여지급일 전일 또는 상환기일 전일까지의 날수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이자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원단위 미만은 버린다.

제 10 조(연체이자) ①원리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연된 원리금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체이자를 받는다.

②용도를 유용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회수된 날까지 연체이자를 받는다.

③연체이율은 연 17%로 한다.

제 11 조(주택자금의 채권보전) 주택자금대여의 채권보전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가. 주택매입자금은 대상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을 취득한다. 다만, 주택건설자금은 대상대지에 대하여 우선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건물완공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나. 가목의 담보취득은 1순위 근저당권 취득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순위가 앞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감정액에서 순위가 앞선 담보권의 채권최고금액을 뺀 금액이 공사가 필요로 하는 근저당권 취득금액이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근저당에 대한 채권최고금액은 대여금액의 120% 이상으로 한다.

라. 주택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부보하게 한다. 다만, 대여승인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다음 각목의 기간으로 취득한다.

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제8조 제1항 제2호의 기간을 초과하는 직원은 동기간

나. 기타 직원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3. 공사 퇴직금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다.

- 가. 퇴직금 질권설정계약을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으로 설정
- 나. 대출신청일 기준 채무자의 공사 퇴직금 실지금액(제세공과금 제외)에 대하여 대출금의 110%를 설정

제 12 조(학자금의 채권보전) 학자금 대여의 채권보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여신청 전월말 현재 퇴직금 해당액 범위내(임원의 경우 대여한도 범위내)에서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신청금액이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이내이거나 직원의 직급 등에 비추어 상환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대여신청일 직전 납입일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2분의 1 범위이내에서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퇴직연금수급권) 질권설정계약을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하고, 해당 내역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질권은 대출금의 110%를 설정한다.
3. 퇴직금 해당액 범위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2분의 1 범위를 초과하여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적담보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취득한다.

제 13 조(주택임차자금의 채권보전) 주택임차자금 대여의 채권보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여신청 전월말 현재 퇴직금해당액 범위내에서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취득한다. 다만, 대여신청금액이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이내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여신청 전월말 현재 퇴직금해당액을 초과하여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취득한다.

제 14 조(사후관리) ①연체 또는 유용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회수하여야 하며, 신규대출을 억제한다.

②채무자에게 차용금증서상 기한이익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 질권담보 등 대출금 전액에 대한 채권보전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다.

③제7조 제1항 제2호 나. 목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직원이 해당 기간 내에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종료 후 다음 영업일까지 회수하여야 한다.

④무주택직원이 아닌 자(제7조 제1항 제2호 나.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가 주

택자금대여를 받은 경우에는 대여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자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하고, 대여취급일로부터 주택자금 상환일까지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받아야 하며, 또한 복지자금을 받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주택자금을 대여받아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였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잔금수령전에 신규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주택자금을 대여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근무처를 이동하여 임차주택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미 대여받은 주택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⑦주택임차자금을 대여받은 직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신청 당시의 부양가족이 모두 입주하게 하여야 하며, 입주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주택임차자금을 대여받은 직원은 임차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

⑨주택임차자금의 강제회수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차계약주택에서 무단 전출하는 경우
2. 임차계약주택에서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3. 자신, 배우자, 직계비속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4. 무주택직원이 아닌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관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제9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하고, 제9항 각호의 사유발생일로부터 주택임차자금 상환일까지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받아야 하며, 또한 복지자금을 받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⑪대여승인권자는 주택임차자금을 대여받은 직원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주민등록등본 등 사후관리 서류를 제출받아 거주사실 및 대여자격 변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5 조(취급이관) 대여승인권자는 직원이 인사이동된 때에는 복지자금을 부임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 16 조(세부사항)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복지담당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정)

①(시행일) 이 요강은 199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가 설립된 연도의 대여금의 총액은 설립당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 칙(1)

이 요강은 199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요강은 199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요강은 199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취급한 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4)

①(시행일) 이 요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신규분양받아 주택자금을 수혜받고 있는 직원 중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여한도 범위내에서 추가대여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제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된 대여(거치)기간은 시행일 이후 신규대여건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부 칙(5)

①(시행일) 이 요강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강 제3조 단서조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요강은 199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요강은 199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대여한 주택자금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8)

이 요강은 199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요강은 199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이 요강은 200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이 요강은 200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이 요강은 200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이 요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이 요강은 200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대여조건)는 2001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이 요강은 2002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이 요강은 200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이 요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이 요강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이 요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이 요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